

제27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1. 4. 23.(금)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기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동일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하여는 감면기한을 연장코자 함

## 3.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하여 감면기한 연장

- 1) 2021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2)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0조 신설)

-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재산세 50% 감면
  - 2) 실효기간이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제외
  -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재산세 50% 감면조항 신설
-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다. 조문정비(안 제2조제4항)

- 1)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 “자동차세”
- 2) 시세 관련 조례에 불필요한 취득세(도세) 세목 삭제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세정과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 이내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금년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을 권고 받음에 따라 관계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1. 1. 12.)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 2021. 1. 12.(화) ▪ 총 4쪽 (붙임 2쪽 포함)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작성 | 도시수자원 민원과 |                |
|    | 과 장 정혜영   | ☎ 044-200-7481 |
|    | 사무관 박재천   | ☎ 044-200-7490 |
|    | 사무관 이명호   | ☎ 044-200-7488 |

##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권고 -

-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시공원 관련 민원

- 294건(‘15년)→216건(‘16년)→264건(‘17년)→332건(‘18년)→389건(‘19년)

- ☐ 1999년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국토교통부가 실효제도를 마련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있다.

하지만 재원마련이 어려운 일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르게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둘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하며,

셋째,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는 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넷째,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해 나치게 엄격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의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빈발민원을 분석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시세조례 및 시행규칙, 시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 시세 조례 및 시행규칙
  - 주민세 과세체계 및 용어를 개편
  - 단순조문 정비
- 지방세 감면 조례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감면 일몰기한 연장(5개 조항 적용)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단순 과세체계 및 용어 정비, 감면 규정 신설에 해당)

### 4. 작성자

산업경제국 세정과장 유희근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